

일본 민주당정부의 영토정책에 관한 연구

崔 長 根*

(e-mail : nihonbu@daegu.ac.kr)

目 次

1. 들어가면서
 2. 민주당의 정치이념의 다양성
 3.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정책
 4. 「죽도문제」에 관한 정책
 5. 「센카쿠제도문제」에 관한 정책
 6. 맺으면서
-

1. 들어가면서

자민당은 55년체제 이후 1993년 중의원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여 비자민, 비공산의 8개 야당 연립정부에게 1년 남짓 정권을 넘겨준 적이 있었으나, 이 때를 제외하고 줄곧 정권을 담당해왔다. 그런데 이번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480석 중 308석을 확보하여 자민당을 대신하여 정권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번 민주당정부는 2009년 2월 24일 민주당 하토야마 간사장(5월 16일 대표취임)이 「미국 추종외교에서 국제협조노선으로 전환하여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실현을 국가의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처럼,¹⁾ 종래 자민당정부와는 달리, 「아시아외교의 강화」를 목표로 「중국, 한국을 비롯한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학 전공.

1) 「鳩山由紀夫をもっとよく知りたい人のための資料集【簡略版】」, 『エラ通信のチラシの裏』, 2009년5월18일, era-tsushin.at.webry.info/200905/article_88.html(2009년11월3일 검색).

아시아제국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여 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재해구원, 전염병 대책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역내 협력체제를 확립한다. 아시아·태평양 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과 투자·노동이나 지적 재산 등 넓은 분야를 포함하는 경제연대협정(EPA),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방침을 세웠다.²⁾

종래 자민당정부는 아시아중시외교 보다는 일미동맹을 더욱 중시하여 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과 중국, 북한등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영토정책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야당시절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자민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전 자민당정부는 동아시아 3국과의 영토분쟁에 있어서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로서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죽도’는 한국, ‘북방4도’는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릴열도와 독도는 조기에 회복해야할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민당의 영토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정부는 영토정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우선 민주당의 정치적 이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민주당 요인의 영토정책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주당정부의 외교정책 중에서 영토정책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아직 민주당정부의 영토정책에 대해 검토한 없다.

2. 민주당의 정치이념의 다양성

민주당의 정치이념을 규명하는 것은 민주당의 대외영토정책을 고찰하는데 유의할 것이다. 민주당은 1998년菅直人, 鳩山由紀夫 등이 신당사키가케에서 탈퇴(1996년9월)하여 이들이 중심이 되어 대표 鳩山由紀夫, 대표대행 小澤一郎,菅直人, 興石東, 간사장 岡田克也, 참의원 의원단회장 興石東로 하여 창당되었다. 1998년 4월 원내회파 「민주우애태양국민연합」(민주련)에 참가하고 있던 구민주당·민정당·신당우애·민주개혁연합이 정권전략회의 의장이었던 細川護熙의 주도로 기존 정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에 합류하여菅直人를 초대당대표로 선임하여 새로운 민주당으로 재창당하게 되었다.

2) 「민주당정책집」, <http://www.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index.html>(2009년11월3일 검색).

민주당은 이처럼 다양한 계파가 모여서 만든 정당이다. 당내에는 공산당, 사민당과 같이 중군위안부의 명칭을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로 바꾸자고 하는 小澤一郎 등의 그룹과 위안부문제와 난징(南京)사건을 부정하는 前原誠司 등의 그룹으로 나뉘져 있고, 또한 당내 주류파 중에는 제일 영주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鳩山由紀夫·岡田克也 등의 그룹과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뉘져 존재하다.³⁾ 따라서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중도좌파 사회자유주의」라고 하지만,⁴⁾ 2006년 4월 14일 오자와 이치로 대표체제의 하토야마 간사장은 보수 중도와의 연대도 시사했다.⁵⁾ 이처럼 보수, 중도, 좌파까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안 별로 항상 대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석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6월 총선거로 32의석에서 127의석이 되었다. 2003년 9월 민주당(대표 菅直人)은 민주당의 임원과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여 자유당(小澤一郎 대표)과 합병하여 2003년 11월 총선거에서 177의석이 되었다. 2004년 7월 참의원의원 선거에서 50의석을 획득했고, 비례구 득표에서는 자민당을 추월했다. 2005년 9월 총선거에서는 113의석 획득으로 참패하여 岡田克也 대표를 사임하고 前原誠司가 菅直人和 경합하여 대표가 되었다. 2006년 4월 前原誠司가 대표를 사임하고 小澤一郎가 새로운 대표가 되었다. 2007년 7월 참의원의원 선거에서 60의석을 획득하여 참의원110의석(정수 242)을 획득하여,⁶⁾ 처음으로 참의원에서 제1당이 되었다. 2009년 5월 오자와 대표는 비서 西松의 현금문제로 당의 지지율 하락과 당내 동요를 막기 위해 대표직을 사임했다. 5월17일 대표선거에서 鳩山由紀夫가 岡田克也和 겨루어 대표가 되었다. 2009년 7월12일 東京都 의회의원선거에서 54의석(정수127)을 획득하여 都政에서 처음으로 제1당이 되었다. 2009년 8월30일 중의원의원 총선거에서 480의석 중에 308의석(64%)을 획득하여 자민당을 누르고 제1당이 되어 정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을 보면, 「유엔에서의 역할」에 대해 「일본은 유엔이 국제평화, 안전과 번영에 대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유엔개혁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한다. (중략) 우리나라가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유엔평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한다」고 하는 방침을

3) 일반적으로 자민당은 보수·중도우파라고 하고, 민주당은 리버럴·중도좌파 정당이라고 함. 하지만 일부 보수적 이념의 의원들도 소속되어 있고,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주장하는 의원도 참가하고 있음. 鳩山由紀夫는 「좌파는 민주당의 이념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음.
 4)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5) 「鳩山由紀夫をもっとよく知りたい人のための資料集【簡略版】」, 『エラ通信のチラシの裏』, 2009년5월18일, era-tsushin.at.webry.info/200905/article_88.html(2009년11월3일 검색).
 6)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세우고 상임이사국에 들어가서 국제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의도하고 있다.⁷⁾

하토야마 수상은 정치적으로 민주당 계열의 자민당 총리였던 조부 하토야마 이치로 수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조부 하토야마는 「자주개헌과 재무장을 주장했고, 일본의 안보는 스스로 담당해야하므로 미국에 강요당한 평화헌법은 개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⁸⁾ 민주당의 정책과 조부 하토야마 수상과의 정치이념의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하토야마 수상의 동생인 자민당의 하토야마 쿠니오 전총무상은 「1996년 민주당 창당 시 현재의菅直人 부총리, 형(하토야마 총리), 横路孝弘 중의원 의장은 '미군의 상시주둔은 필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였다。」라고 하여 하토야마가 주일미군 철수론자임을 지적했다.⁹⁾ 민주당 간사장 오자와 이치로도 보통국가론을 주장한 인물로서 자주적인 안보를 주장하고 있다.¹⁰⁾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어 유엔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주도적으로 대아시아정책을 중시하여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¹¹⁾ 과거 자민당정부는 대아시아정책보다는 미일동맹을 중시하여 국익을 도모했는데, 민주당 정부는 대아시아정책을 중시하여 국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 정부는 전 자민당정부와 달리 대아시아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영토문제에서 일부러 분쟁을 야기하는 정책은 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정책

(1) 전 자민당정부의 정책

북방영토는 제2차 대전 중 미영소가 합의한 알타회담을 근거하여 소련이 점령하여 현재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일본에 대해 쿠릴열도의 영토주권을 전적으로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북방4개 섬은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고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

7) 「민주당정책집」, <http://www.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index.html>(2009년11월3일 검색).

8) 김세걸/김웅희(2008) 『현대 일본정치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 65.

9) 「하토야마 동생 "총리는 주일미군 철수론자"」, 『조선일보』 2009년11월20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0/2009112000386.html?srchCol=news&srchUrl=news2\(2009년11월23일검색\)](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0/2009112000386.html?srchCol=news&srchUrl=news2(2009년11월23일검색)).

10) 小澤一郎(1993) 『日本改造計畫』 講談社, pp. 102-174.

11) 「민주당정책집」, <http://www.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index.html>(2009년11월3일 검색).

본의 고유영토로서 빠른 시일 내에 반환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¹²⁾ 국회에서는 「북방영토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국민들에게 영유권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고,¹³⁾ 일본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정부에 대해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4도반환과 더불어 영토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해왔다.¹⁴⁾

자민당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麻生太郎 수상은 러시아가 북방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¹⁵⁾ 수상재임기에 러시아대통령 드미트리 메디베데프의 초청을 받고 사할린 남부(南樺太-일본명)를 방문하여 일러수뇌회담을 가졌는데, 이때에 북방영토문제에 대해 「면적이등분」으로 북방영토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전후 역대정권들이 「4도 일괄반환론」을 견지해왔는데, 방침을 변경한 것은 북방영토를 방기한 행위라고 여론의 비난받았다.¹⁶⁾ 사할린 남부에 대해서도 종래 일본은 러시아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귀속미확정지역으로 간주하여 전후 역대 총리대신의 사할린 방문을 피해왔다. 그런데 아소 수상은 러시아출입국의 절차를 밟고 사할린 남부를 당일치기로 방문했고, 귀국 후에는 외국으로부터 귀국했음을 기록하는 황거기장(記帳)을 작성한 것도 사할린 남부를 러시아령으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¹⁷⁾

일본은 영토분쟁지역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주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일본국민이 상당대국 출입국의 허가를 받고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일본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¹⁸⁾ 사할린의 경우는 일부 여론이 아소 총리의 행동을 비난하였지만, 사실상 러시아영토로서 인식되고 있는 러시아영토나 다름없다. 그러나 러일 국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소의 행동은 북방영토의 반환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2) 민주당 요인의 발언 분석

현재 민주당정부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하토야마 수장과 민주당의 실질적

12) 「北方領土問題」, <http://www.mofa.go.jp/mofaj/area/hoppo/index.html>(2009년11월3일 검색).

13) 木村汎(1989)『北方領土 一軌跡と返還への助走一』時事通信社, pp. 76-77.

14) 최장근(2009)『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의 정치학』제이앤씨, pp. 139-189.

15) 「『鳩山ブランド』で進展狙う＝北方領土解決に意欲－対ロ外交」, 『時事通信』2009년9월6일,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906-00000024-jjj-pol>(2009년11월3일 검색).

16) 「麻生内閣」, [http://ja.wikipedia.org/wiki/\(2009년11월3일](http://ja.wikipedia.org/wiki/(2009년11월3일) 검색).

17) 「麻生内閣」, [http://ja.wikipedia.org/wiki/\(2009년11월3일](http://ja.wikipedia.org/wiki/(2009년11월3일) 검색).

18) 독도에 대한 입도도 제한하고 있어서 일본국민은 독도에 입도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2006년 죽도문제연구회의 울릉도 조사시 독도 입도를 행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독도연구자들 도 독도를 연구하면서도 독도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대화에서 확인하게 되었음.

인 실력자인 오자와 간사장의 북방영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鳩山 수상은 민간우호단체인 「일러협회」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친러파이다. 과거 하토야마는 우선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북방4도의 주권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만 러시아로부터 인정만 받는다면 반환 시기나 방법은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05년 러시아를 방문하여 4도반환을 달성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과도적으로 「공동통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¹⁹⁾ 또한 조부 鳩山一郎가 서명한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할 경우 「齒舞, 色丹 2도를 일본에 인도한다」고 결정한 2점을 우선적으로 반환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취한 적도 있었다.²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하토야마는 유연한 자세로 2도 우선반환 등 러시아측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우선 하토야마 수상의 인식을 살펴보자. 민주당 鳩山 대표(9월 17일 수상 취임)는 1956년 소련과 국교회복을 해낸 鳩山一郎 전 수상의 손자이다. 하토야마는 이런 브랜드의 힘을 최대한 살려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8월 30일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총리 내정을 앞둔 鳩山 대표는 9월 3일 주일러시아대사 베이루이와 회담하고 기자회견에서 「鳩山라는 이름은 러시아에 꽤 알려져 있어서 러일관계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여 영토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욕을 나타내었다.²¹⁾

다음으로 오자와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09년 5월 12일 小澤一郎 대표가 鳩山由紀夫 간사장, 奥村展三 총무위원장 대리(임원실 담당)가 동석한 자리에서 러시아 푸틴 수상과 도쿄 도내에서 회담했다. 이때 러시아수상 푸틴이 「상호가 인내하고 상호가 존중하여 하나하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친구이기에 해결이 가능하다. 해결방향을 찾아서 부드럽게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小澤 대표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친구관계가 되면 영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특히 극동러시아에 관해서는 일본은 자원을 공여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발전에도 공헌해야 하고, 생활의 향상과 환경정비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일을 실현하면서 영토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²²⁾

19) 「鳩山ブランド'で進展狙う=北方領土解決に意欲-對ロ外交」, 『時事通信』2009년9월6일, [http://headlines.yahoo.co.jp/\(2009년11월3일 검색\)](http://headlines.yahoo.co.jp/(2009년11월3일 검색)).

20) 「鳩山ブランド'で進展狙う=北方領土解決に意欲-對ロ外交」, 『時事通信』2009년9월6일, [http://headlines.yahoo.co.jp/\(2009년11월3일 검색\)](http://headlines.yahoo.co.jp/(2009년11월3일 검색)).

21) 「鳩山ブランド'で進展狙う=北方領土解決に意欲-對ロ外交」, 『時事通信』2009년9월6일, [http://headlines.yahoo.co.jp/\(2009년11월3일 검색\)](http://headlines.yahoo.co.jp/(2009년11월3일 검색)).

22) 「友好關係を深めながら北方領土問題解決 小澤代表、プーチン首相が一致」, [http://www.dpj.or.jp/news/?num=15914\(2009년11월3일 검색\)](http://www.dpj.or.jp/news/?num=15914(2009년11월3일 검색)).

다시 말하면, 러시아는 4도반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푸틴의 언급은 일본국민을 설득하여 2도 인도로 영토문제의 해결을 시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고, 오자와는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원조하는 형식으로라도 러시아로부터 4도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푸틴은 오자와의 제안에 대해 「그러한 생각도 구체적으로 검토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여 즉답을 피했다.²³⁾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오자와는 북방4도 모두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2도 우선반환을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래 일본정부의 방침과 마찬가지로 4도 일괄반환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3) 민주당정부의 정책 방향

민주당정책으로 「일러 관계」에 대해 「일러관계의 강화」라는 제목으로 「경제·문화교류의 활성화와 자원개발의 협력 등을 통해 일러관계를 강화한다. 북방영토의 조기반환을 향해 끈기 있게 교섭에 임한다.」 또한 「전후 체과제의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하여 일러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결방법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擇捉島, 國後島, 色丹島, 齒舞群島 이른바 북방4도의 조기반환을 목표로 한다. 또 경제·문화교류 등을 통해 러시아국민과의 신뢰양성, 원래 거주민에 대한 지원, 국민여론의 환기 등 반환을 위한 환경정비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고 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²⁴⁾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자민당정부의 정책과 동일한 것으로,²⁵⁾ 북방영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²⁶⁾

민주당의 입장은 북방4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므로 조기반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주변국가인 러시아와의 평화조약체결을 위해서라도 북방영토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²⁷⁾

이렇게 볼 때, 장기적으로 4도반환이 전제가 될 경우에는 2도우선반환도 고

23) 「友好關係を深めながら北方領土問題解決 小澤代表、プーチン首相が一致」, <http://www.dpj.or.jp/news/?num=15914>(2009년11월3일 검색).

24) 「민주당정책집」, <http://www.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index.html>(2009년11월3일 검색).

25) 전게서,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영토분쟁의 정치학』, pp. 139-189.

26) 「민주당정책집」, <http://www.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index.htm>(2009년11월3일 검색).

27) 「政策集INDEX 2 0 0 9」, <http://www.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index.html>(2009년11월3일 검색).

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야당시절 2009년 7월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하는 참의원에서 북방영토의 조기반환 실현을 위해 「改正 北方領土問題 等 解決促進 特措法」을 만들어 북방4도가 전적으로 「우리나라 고유영토」라고 명기한 법안을 성립시켰다.²⁸⁾ 이 법안에 대해 일본 국내 일부여론은 齒舞, 色丹 2도 반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다. 齒舞, 色丹 2도는 북방영토 전체의 10분의 1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정부가 북방영토문제에 있어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4도반환」을 전제로 한 「2도우선반환」의 전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러시아의 입장은 어떠한가? 러시아 정부계열 신문은 민주당정부의 성립을 보면서 북방영토문제에 대해 「鳩山代表의 조부 鳩山一郎 전 수상은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 서명하여 일본과 소련이 국교를 회복했다」고 전제하면서도 鳩山 수상이 되어도 「극적인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²⁹⁾ 또한 러일관계를 연구하는 모스크바의 극동연구소 비부리아 텐코 박사는 「鳩山家の 사람들이 소련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영토문제를 교섭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조부처럼 대담하게 2개의 섬에 국한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지적했다.³⁰⁾ 이처럼 러시아는 4도반환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고, 2도반환이라면 북방영토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요컨대 민주당은 북방영토를 조기에 반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간사장도 이러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방법적인 면에서 하토야마 수상은 조부 하토야마 전 수상이 2도반환을 고려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4도 일괄반환에는 고집하지 않겠지만, 4도반환을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자와의 경우는 4도반환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반환방법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러시아는 4도에 대한 영유권 의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1956년의 공동성명에서 제안한 바 있는 「2도인도」³¹⁾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³²⁾ 하지만 전후 줄곧 자민당정부가 4도반환을 위해 평화

28) 「鳩山ブランド」で進展狙う＝北方領土解決に意欲－對ロ外交, 『時事通信』2009년9월6일, [http://headlines.yahoo.co.jp/\(2009년11월3일 검색\)](http://headlines.yahoo.co.jp/(2009년11월3일 검색)).

29) 「ロシア 領土問題“進展ない”祖父に言及、鳩山代表との縁紹介」, 『産経新聞』2009년9월1일, [http://headlines.yahoo.co.jp/\(2009년11월3일 검색\)](http://headlines.yahoo.co.jp/(2009년11월3일 검색)).

30) 「鳩山ブランド」で進展狙う＝北方領土解決に意欲－對ロ外交, 『時事通信』2009년9월6일,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906-00000024-jij-po\(2009년11월3일 검색\)](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906-00000024-jij-po(2009년11월3일 검색)), 월간지 「今日の日本」의 편집장 파루피리에프도 모스크바 라디오국에 대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31) 러시아는 북방4도를 러시아영토라고 하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반환」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차원에서 평화조약 체결을 전제로 2도를 「인도」할 수 있다는 입장임.

조약체결을 미루어왔고, 일본국민들도 4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으로 교육되어져왔기 때문에 민주당정부가 아무리 혁신정부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강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방영토문제는 종전처럼 새로운 변화 없이 현상유지상태로 진행될 것임에 분명하다.

4. 「죽도문제」에 관한 정책

(1) 전 자민당정부의 정책

원래 독도는 2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고 울릉도에서도 87km나 떨어져 있는 무인 암초였다. 독도는 1945년 해방이후 일본인들의 진입을 금지하는 맥아더라인에 포함되어 동해안 어민들의 어로지로서 활용되었고, 제2차 대전의 종결을 의미하는 대일강화조약 체결로 맥아더라인이 철폐되면 일본인들의 침입을 우려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역사적 권위를 바탕으로 독도를 포함하는 영역에 영토주권(평화선)을 선언했고, 이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본정부는 1905년 무주지선점으로 일본영토에 편입된 섬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³²⁾

전 자민당정부는 ‘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무력으로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⁴⁾ 과거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에 한국경찰 주둔과 주민의 거주, 등대설치, 접안시설 건설 등을 항의했고,³⁵⁾ 특히 전 자민당정부는 2008년 중학교사회과교과서 지도요령해설서에 죽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게재하여 모든 중학교 사회과교과에서 ‘죽도’ 영유권 교육을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외무성홈페이지에서는 「죽도문제」라는 항목을 만들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죽도가 일본영토인 10가지 이유」를 일본어판, 영어판, 한국어판, 아라비아판, 중국어판, 프랑스판, 독일판, 포르투갈판, 러시아판, 스페인판 등 10개국 언어로 작성하여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³⁶⁾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를 보

32) アラージン・V・V (2005) 『ロシアと日本：平和條約への見失われた道標 ーロシア人からの88の質問への回答』モスクワ：COU,UYM.

33) 下條正男(2005) 『竹島一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縣民會, pp. 26-66.

34) 「竹島問題」,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2009년11월3일 검색).

35) 최장근(2008) 『독도의 영토학』 대구대학교출판부, 144-147. 최장근(2008) 「독도의 영유권」, 경상북도편 『독도총서』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 pp. 333-373.

36) 「竹島問題」,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2009년11월3일 검색).

면 중요한 사료 중에서도 불리한 자료는 무시하고 필요한 부분을 유리하게 왜곡 해석하여 일본영토라는 일본적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³⁷⁾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독도를 분쟁지역 내지는 일본영토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국민에 대해서는 한국출입국의 절차를 밟아서 ‘죽도’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일본국민이 한국측의 관할권에 복종했다거나, 죽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했다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⁸⁾

특히 독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는 시마네현은 2005년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일본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죽도’ 영토화 정책을 부추기고, 국민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민당 의원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죽도의 날」의 조례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민당정부가 이를 묵인했다고 할 수 있다.³⁹⁾

(2) 민주당 요인의 발언 분석

민주당의 독도영유권 인식으로서 민주당대표이고 총리대신인 하토야마 수상과 민주당의 실질적인 권력자로 알려져 있는 오자와 간사장의 독도 인식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두 요인은 2008년 자민당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중학교사회과 교과서 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영유권에 관한 항목을 삽입한 것에 대해 제각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야당시절 하토야마의 독도인식에 대해 살펴보자.

민주당 간사장으로서, 2006년 4월 21일 「죽도문제로 한국과 충돌하게 되면 납치문제에 악영향을 미친다.»⁴⁰⁾ 2006년 5월 4일 한국을 방문해서는 「독도 문제는 일본(자민당정부)의 외교적 실패」 「일본측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⁴¹⁾ 2006년 5월 5일 반기문 외무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담화’를 통해 일본의 각성을 촉구했다고 전했을 때, 민주당 간사장이었던 하토야마는 「‘생각해보겠다.’ 라고 말했다.⁴²⁾ 2006년 8월 11일 하토야마 민주당 간사장은

37) 高野雄一(1962) 『日本の領土』東京大學出版會, p. 69.

38) 「竹島問題」,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2009년11월3일 검색).

39) 후술하는 것처럼 민주당의원들 중에서는 「죽도의 날」 제정을 비난하기도 했음.

40) 「鳩山由紀夫をもっとよく知りたい人のための資料集【簡略版】」, 『エラ通信のチラシの裏』, 2009/05/18, era-tsushin.at.webry.info/200905/article_88.html(2009년11월3일 검색).

41) 「鳩山由紀夫をもっとよく知りたい人のための資料集【簡略版】」, 『エラ通信のチラシの裏』, 2009/05/18, era-tsushin.at.webry.info/200905/article_88.html(2009년11월3일 검색).

42) 「鳩山由紀夫をもっとよく知りたい人のための資料集【簡略版】」, 『エラ通信のチラシの裏』, 2009/05/18, era-tsushin.at.webry.info/200905/article_88.html(2009년11월3일 검색).

「(자민당 정부가) 중국과 한국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상하다.」 「편협한 내셔널리즘적인 발상이다. 내셔널리즘이 재발되는 것이 우려된다.」 고 했다.⁴³⁾ 2009년 10월 9일 총리가 되어 한국을 방문한 하토야마 수상은 「당연히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신정부가 ‘똑바로 역사’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취임한 지가 3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인 유예도 시간적인 여유도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일·한 관계를 더욱더 양호하게 할 것」 이라고 했다.⁴⁴⁾

이를 보면, 하토야마 수상은 독도문제로 한일 양국이 충돌해서는 안 되고,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선급하게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교과서에 실어서 학생들에게 지도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하토야마 수상은 독도영유권에 대해 전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인정하지 않고 분쟁지역(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한국영토)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독도문제를 가지고 한일 양국 사이에 부딪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오자와 이치로의 「죽도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야당시절 민주당 대표로서 오자와는 일본국민들 중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국에 융화(融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무리도 있다. 이에 대해 오자와는 오히려 일본이 지금까지 자기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현재도 한국, 중국, 미국의 수상들에게 할 말은 다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어서 결론을 내면 그 결론을 존중해야한다.」 라고 했다.⁴⁵⁾

2008년 11월 3일 일본 東洋대학 축제에서 「나는 죽도는 일본영토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국은 한국대로 그것을 한국영토라고 주장하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일본의 주장을 가지고 분명하게 한국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야할 것이다.」⁴⁶⁾ 2008년 7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한국이

43) 「鳩山由紀夫をもっとよく知りたい人のための資料集【簡略版】」, 2009/05/18, era-tsushinat.webry.info/200905/article_88.html(2009년11월3일 검색).

44) 「[디카] 한-일 정상 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2009년10월9일, 『NEWS-A』, [http://www.newsa.co.kr/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5586&flag=\(2009년11월3일](http://www.newsa.co.kr/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5586&flag=(2009년11월3일) 검색).

45) 「竹島は日本の領土と思っている -小澤代表發言ネットで噛みつかれる」, 『J-CASTニュース』 2008년11월7일,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3891453/>(2009년9월10일 검색). 이하 오자와 관련내용은 모두 본 기사에서 인용한 것임.

46) 「韓國、中國、アメリカの首脳にズケズケ言っています」, 小澤대표는 2008년11월3일 投稿動画사이트「ニコニコ動画」의 생방송「1万人ネット會見」에 출연. 회견장은 학원축제개최의 東洋大學,

실력지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까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방치해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영토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⁴⁷⁾ 「서로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검증한 후에 소속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발언했다.⁴⁸⁾ 또한 「죽도에 대해 일한 양국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철저히 대화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 대화를 피하면서 교과서에 게재한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했다.⁴⁹⁾

오자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부 일본국민들 중에는 「이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오자와 대표는 죽도를 일본영토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⁵⁰⁾ 또한 「일본이 수십 년간 공식적으로 국제재판을 계속적으로 신청해 온 것도 모르는가?»⁵¹⁾ 「처음부터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이니까. “일본영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관계를 조사해보니 한국영토였다” 라는 식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무언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라고 비판하기도 한다.⁵²⁾

이처럼 오자와는 1905년 무주지 선점으로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어서 원래 일본영토였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령하게 된 이후 일본이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묵인해왔다. 이를 보면 한국도 충분히 영유권을 주장할 입장이 된다. 이처럼 분쟁지역에 해당되는 섬에 대해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일본영토라고 가르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로서 먼저 한일 양국이 철저히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의 소속되는 영토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자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다테마에(형식)적으로는 일본영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전후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민주당정부의 정책 방향

민주당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죽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이다.」 라고 하는 입

사회자 勝谷誠彦氏が 질문을 했음.

47) 「朝日新聞」 2008년7월16일,

48) 「産経新聞」 2008년7월16일.

49) 「小澤の賣國發言 竹島問題(投稿者: 一凡人)」,

<http://www.rondan.co.jp/html/mail/0807/080716-19.html>(2009년11월3일 검색), 「民主・小澤氏 - 日韓で話を」, 「日経」 2008년7월16일.

50) 「竹島は日本の領土と思っている, 小澤代表發言ネットで噛みつかれる」, 『J-CASTニュース』 2008년11월7일,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3891453/>(2009년9월10일검색)

51) 전계의 「ニコニコ動畫」의 댓글欄의 멘트.

52) 전계의 「2ちゃんねる」의 멘트.

장을 취하고 있다.⁵³⁾ 「영토문제」 해결에 대해 「영토문제의 조기해결」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토문제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영토주권을 가지는 북방영토·죽도문제의 조기에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 있게 대화를 계속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일한 양국의 신뢰관계의 강화」라는 제목으로 「동아시아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일한 양국의 신뢰관계를 강화한다. 한국은 6자협회의 당사국이기도 하고 양호한 일한관계의 재구축은 북한에 의한 납치, 핵, 미사일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동아시아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게다가 일한중 3개국의 강력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해간다. 일한 F T A 체결과 죽도문제의 해결 등을 추진한다.」라고 하여 독도문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북방영토와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고 있고, 자민당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여론 중에 「민주당에는 한국의 정치요인들을 만나서 죽도문제로 공격하는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⁵⁴⁾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듯이 민주당이 대아시아정책을 중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영토분쟁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죽도’ 영유권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이런 점이 전 자민당정부와의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일본의 일부여론이 오자와가 언급한 「사실상 한국이 실력지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까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방치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영토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로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검증한 후에 소속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발언을 비난한 것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은 「~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오자와 대표의 특유의 말버릇이다. 일본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죽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⁵⁵⁾」라고 하여 민주당의 입장도 일본정부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방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변했다.

한편 민주당 西村 의원은 「TV朝日」 토론 프로에서 「한국이 무력으로 죽

53) 「민주당정책집」, <http://www.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index.html>(2009년11월3일 검색).

54) 전계의 「ニコニコ動画」의コメント欄의 멘트.

55) J-CAST뉴스(종래의 마스크와 달리 독특한 관점으로 비즈니스나 미디어에 관한 다양한 기사를 발신하고 있다. 독도투고의 코멘트 란도 충실히 하고 있음)가 취재한 것임.

도를 점령한다면 일본도 무력으로 대항해야한다。」⁵⁶⁾라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 중에는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도 존재한다. 반대로 시마네현의원 小室壽明처럼 「죽도의 날 제정이 아니더라도, 당장 시급한 여러 현안이 많다고 하는 현민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여,⁵⁷⁾ 2005년 2월 시마네현이 제정한 「죽도의 날」 조례에 반대하는 소극적인 영유권론자도 있다.⁵⁸⁾ 따라서 독도문제를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영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따라서 현상유지를 견지하면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먼저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할 것임에 분명하다.

향후 민주당정부로서는 독도문제에 대해 상기와 같은 방침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2가지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는 전 자민당정부에서 세운 일본외무성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변경할 것인가 문제이다.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독도문제의 본질⁵⁹⁾을 일본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왜곡된 일본적 논리만 홍보해왔다. 이로 인해 일본국민은 독도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것만을 믿고 있다. 올바른 한일관계를 정립하려면 일본국민들에게 독도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일본외무성이 이러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진정한 한일관계의 구축과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성도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로, 일본정부가 2009년 「고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하토야마 민주당정부가 독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만일 하토야마정부가 「고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문제를 게재하게 된다면 한국은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하토야마정부의 한일관계 개선노력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⁶⁰⁾

56) 「さきほどテレビ朝日の討論番組のなかで竹島問題に触れ民主党の西村議員が、韓国が...」(ID非公開さん), http://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43584694(2009년 9월 10일 검색), 본 기사는 「2005년3월28일자」의 내용임. 내티즌(ID非公開さん) 중 대답 중 일본에서 뽑은 「가장 훌륭한 대답」으로 선택된 것임.

57) 「죽도의 날」 기념식전에 민주당, 사민당, 공산당은 일절 축전 등을 보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죽도의 날」 제정 자체를 반대한 유일한 정당이었음, [http://kuro-neko.iza.ne.jp/blog/entry/930856/\(2009년11월3일](http://kuro-neko.iza.ne.jp/blog/entry/930856/(2009년11월3일) 검색). 당시 민주당현의 · 小室壽明는 島根1區 · 차기중원선거의 민주당 공인후보자임.

58) 「(再掲)「竹島の日」制定に反対した民主党。しかも...:イザ!」, [http://kuro-neko.iza.ne.jp/blog/entry/930856/\(2009년11월3일](http://kuro-neko.iza.ne.jp/blog/entry/930856/(2009년11월3일) 검색).

59) 나이토우 세이쥬(2005) 『독도와 죽도』 제이앤씨. 内藤正中 · 朴炳涉(2007) 『竹島=獨島論争』新幹社.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60) 「鳩山政権に期待感＝竹島問題で對立懸念も－韓国」, 『ソウル時事』 2009년8월31일, <http://www.jiji.com/jc/zc?k=200908/2009083101161>(2009년11월3일 검색).

5. 「센카쿠제도문제」에 관한 정책

(1) 전 자민당정부의 정책

일본은 종래 중국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던 ‘조어도’⁶¹⁾(‘센카쿠제도’-일본명)를 청일전쟁 중에 중국 몰래 은밀한 방법으로 일본영토에 편입 조치한 것이다. 당연히 당시의 중국정부는 일본의 이런 조치를 알지 못했다. 제2차대전의 종전으로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될 때에도 센카쿠제도의 영토지위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일강화조약 이후 오키나와를 점령 통치하면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센카쿠제도를 관할구역에 포함시켰다. 1968년 유엔기구의 조사에 의해 센카쿠제도 주변해역에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요청에 의해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될 때로 규정미국은 센카쿠제도의 영토주권에 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관할권에 대해서는 일본에 넘겼다. 그 이후 일본은 센카쿠제도를 비롯한 주변의 섬들을 포함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1972년 중일공동선언으로 일본의 田中角榮 수상과 중국의 周恩來 수상 사이에서 국교를 회복할 때에는 「尖閣諸島問題を 언급하지 않는다.」 이를 보면 양국은 국교회복을 위해 암묵의 합의로 영유권문제를 유보했던 것이다. 1978년 일중평화우호조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100척의 중국측 어선들이 센카쿠제도 해역에서 시위활동을 벌이면서 평화조약체결D일중해하자, 양국정부는 이 섬의 영유권문제諸島問題を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일본은 이렇게 하여 센카쿠제도를 실효적 지배를 했지만, 실제로는 양국 간諸島영유권 문제를 유보한 측면이 있기 때문諸島양국정부는 서로 정치적 갈등을 피를 보면 島양국을 의상학 측규제했다. 그 사이에 1992년 중국정부는 尖閣諸島를 중국영역에 포함하는 영해법을 공포했다. 이에 問題を일본도 1996년 2월 尖閣諸島를 기점으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했다.⁶²⁾

중국인활동가 7명은 일본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언에 항의하여 尖閣諸島 상학 측시도하려다가 沖繩縣警에 불법입국 혐의로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민당은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이사회에서 센카쿠제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를 유보할 확인하는 국회결의를 제안했다.⁶³⁾ 이에 問항하여 중국의 민중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격렬한 데모로

61) 본 연구에서는 ‘조어도’ 보다는 ‘센카쿠제도’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함.

62) 「尖閣諸島問題の基礎知識」,

<http://allabout.co.jp/career/politicsabc/closeup/CU20040329/index2.htm>(2009년11월3일 검색).

63) 「尖閣諸島領有に關する國會決議を」(自民, 民主兩党),

<http://www.asahi.com/special/senkaku/TKY200403250221.html>(2009년11월3일 검색).

일본 국기를 불태우기년 2 했다. 동시에 일본 우익단체년 2 반발하여 尖閣諸島の 상학 측시도했다. 결국 양국정부는 양국포했다.악화를 우려하여 서로 양국 의 센카쿠제도 상학시도를 막이 항의운동을 영해시켰다.

이처럼 전 자민당정부는 센카쿠제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이 있는 입장에서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로서 영유권문제암묵의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렇게 하 하지만 사실상 중국정부에 대해 분쟁지역임을 간접적으로 묵인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2) 민주당 요인의 발언 분석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에 대해 민주당대표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간사장의 발언이 특별히 찾을 수가 없기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1996년 9월 일본정부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여 尖閣諸島の 영유를 재차 확인하였을 때 홍콩의 활동가가 섬에 상륙을 시도하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1997년 10월 홍콩·대만·마카오의 활동그룹이 센카쿠제도에 상륙했다. 이에 대해 일본우익이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때에 당시 신진당 西村眞悟(현 민주당 의원) 중의원의원은 尖閣諸島에 상륙했고, 「중국의 영유 근거가 없다. 국회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하여 국회결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항의했다.⁶⁴⁾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국회는 尖閣諸島の 영유에 관한 국회결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⁶⁵⁾ 그 이유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센카쿠제도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시절의 민주당 「차기내각」의 「차기 외무장관」이었던 前原誠司는 沖繩縣의 尖閣諸島·魚釣島에 중국인활동가가 불법으로 상륙하여 沖繩縣경찰이 입관난민법규정에 따라 불법입국의 의심으로 체포했다는 것에 대해 「尖閣諸島는 일본고유의 영토이고, 주권에 관계되는 문제이기에 당연한 조치이다. 체포 후 입국 목적과 배경 등을 조사한 후 입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엄격하게 단행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일본)의 주권 하에 있는 尖閣諸島에 (중국활동가의) 상륙을 허가(막지 못

64) 「尖閣諸島問題の基礎知識」,
<http://allabout.co.jp/career/politicsabc/closeup/CU20040329/index2.htm>(2009년11월3일 검색).

65) 「尖閣諸島領有に關する國會決議を」(自民, 民主兩党),
<http://www.asahi.com/special/senkaku/TKY200403250221.html>(2009년11월3일 검색).

한 것-필자주)했다. 중국정부에 대해 냉정하게 대응할 것과 동시에 일본정부는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비 등에 관해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지적하여 자민당정부가 일본의 주권 하에 있는 센카쿠제도에 중국활동가의 상륙을 ‘허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⁶⁶⁾

이처럼 민주당은 센카쿠제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고, 중국인의 불법 상륙은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정부에 대해서도 영토주권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간사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고, 전 자민당정부처럼 일중간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센카쿠제도문제로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일 것이다.

(3) 민주당정부의 정책 방향

민주당의 정책방침에 센카쿠제도의 영유권문제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다. 그러나 「센카쿠제도의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 자민당정부시절의 외무성의 방침이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정부도 동일한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대중국외교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일본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이웃국가이고,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층 우호협력관계를 촉진한다. 양국 간에는 음식의 안전, 인권, 환경, 에너지, 군사력의 투명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등의 현안사항을 갖고 있다. 양국 수뇌 사존, 강력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현안이 되어있는 제 문제에 관해서 건설적으로 대화로 문제해결을 목표로 한다. 북한의 핵개발문제 등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6자회담의 장과 중조 간에서 중국이 한층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다. 민주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에 설치된 ‘교류협의기구’를 통해 양당 사이의 지속적인 교류, 협의를 통해 신뢰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해준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⁶⁷⁾

다시 말하면 일본이 센카쿠제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중간의 현안으로서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동중국해가스전 개발문제」는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만과의 교류」라는 제목으로 「대만과의 민

66) 「中國人活動家の尖閣諸島上陸問題について (談話)」, 民主党「次の内閣」ネクスト外務大臣 前原誠司의 발언, <http://www.dpj.or.jp/news/?num=244>(2009년11월3일 검색).

67) 「민주당정책집」, <http://www.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index.html>(2009년11월3일 검색).

간을 기반으로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한다. 2005년 일미 안전보장협의 위원회의 공동발표에서 공통전략의 목표로서 대만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민주당은 대만의 일방적인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동시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도 반대한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중국·대만에 모든 예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때 1972년의 일중공동성명이 전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⁶⁸⁾ 1972년 일중공동성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중국이라고 표명하여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보고 있지만, 무력통일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만과의 사이에는 센카쿠제도의 영토문제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동중국해 가스문제와도 대만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고 있고, 중국과는 동중국해 가스전문제가 현안으로 남아있지만, 센카쿠제도의 영유권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6. 맺으면서

이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이념, 당 요인들의 영토인식과 각 영토분쟁지역에 대한 당의 정책 그리고 향후 방침 등을 검토하여 전 자민당정부를 대신한 새로운 일본 민주당정부의 영토정책에 관해 고찰해보았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당은 1998년 설립될 당시 사회자유주의 중도 좌파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보수와 진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의 정치인들이 모인 집단이다. 따라서 특정한 정책에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 하토야마 수상의 리더십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영토정책에 있어서도 전 자민당정부의 정책을 전적으로 수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하토야마정부가 대아시아정책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분쟁화로 인한 갈등조장은 최대한 자숙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정부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빠른 시일 내에 영토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에서 전 자민당정부와 정책상의 변화

68) 「민주당정책집」, <http://www.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index.html>(2009년11월3일 검색).

는 없다. 다만 민주당정부는 영토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요인들의 인식도 4도 일괄반환보다는 4도 반환을 전제로 2도 우선반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죽도」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방침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종전 후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상유지정책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센카쿠제도」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자민당정부와 마찬가지로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동중국해의 가스전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일 양국 서로가 분쟁지역임을 묵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효적 지배기간을 연장하려는 것도 전 자민당정부와 동일하다고 본다.

다섯째, 전 자민당정부는 미일관계를 중시하고 대아시아정책을 무시해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정부는 전 자민당정부와 달리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라는 지상의 과제를 갖고 최대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토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이 분명하다.

【参考文献】

- 경상북도편(2008) 『독도총서』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 pp. 333-373.
- 김세걸/김응희(2008) 『현대 일본정치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 65.
- 나이토우 세이츄(2005) 『독도와 죽도』 제이앤씨.
-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장근(2008) 『독도의 영토학』 대구대학교출판부, 144-147.
- _____(2009)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의 정치학』 제이앤씨, pp. 139-189.
- アラージン・V・V (2005) 『ロシアと日本：平和條約への見失われた道標 ーロシア人からの88の質問への回答』 モスクワ：COU,UYM.
- 小澤一郎(1993) 『日本改造計畫』 講談社, pp. 102-174.
- 木村汎(1989) 『北方領土 一軌跡と返還への助走一』 時事通信社, pp. 76-77.
- 下條正男(2005) 『竹島一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縣民會, pp. 26-66.
- 高野雄一(1962) 『日本の領土』 東京大學出版會, p. 69.
- 内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獨島論争』 新幹社.
-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朝日新聞」 2008년7월16일,
「産経新聞」 2008년7월16일.
- 「민주당정책집」, <http://www.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index.html>(2009년11월3일 검색).
- 「北方領土問題」, <http://www.mofa.go.jp/mofaj/area/hoppo/index.html>(2009년11월3일 검색).
- 「麻生内閣」, <http://ja.wikipedia.org/wiki/>(2009년11월11일 검색).
- 「政策集INDEX 2 0 0 9」, <http://www.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index.html>(2009년11월20일 검색).
- 「竹島問題」,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2009년11월23일 검색).
- 「さきほどテレビ朝日の討論番組のなかで竹島問題に触れ民主党の西村議員が、韓国が…」(ID非公開さん), http://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43584694(2009년 9월 10일 검색),

要 旨

従前の自民党政府に代って新しく民主党政府になった。民主党は1998年中道左派の理念をもって創設されたものだが、実際左派から右派まで様々な理念をもっている。民主党政府の実力者としては、総理大臣である鳩山由起夫代表、党幹事長である小沢一郎である。前自民党政府は日米同盟を重視して対アジア外交はそれほど重視しなかった。ところが、新しい民主党政府はアジア共同体の結成を目指しているので日米関係よりも対アジア外交を重視するとした。このような対アジア重視政策は領土政策に与える影響も大きいと思う。領土問題には、中国との間の「尖閣諸島」問題、ロシアとの間の「北方領土」問題、韓国との間の「竹島」問題がある。まず民主党政府は、前自民党政府と同じように領有権について基本的にこれらのすべて地域に対して日本の固有領土であるとしている。第2に、「北方領土」の場合は4島返還を前提にして2島先返還を目標としている。「竹島」の場合は韓国が実効支配して相当の時間が経っていることを認めて、先に歴史的に所屬を明確にした上で領有権を主張すべきであるとの認識をもっているので、できる限り現状維持の方針を取っている。尖閣諸島の場合は日本が実効的に支配していることから領土問題は存在しないとの方針をもっている。しかし日中両国の間では暗黙的に紛争地域として認めあっているところがあるため両国ともに実効支配の強化を避けようとしている。第3に、民主党政府は対アジア重視政策をとっているため、できる限り解決しにくい領土問題で外交関係を悪くしたくないとしている。

キーワード：日本民主党政府、民主党の理念、竹島問題、北方領土問題、尖閣諸島問題

투 고 : 2009. 11. 30
1차 심사 : 2009. 12. 12
2차 심사 : 2010. 01. 09